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7
----------	------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안민석 · 김민철 · 문진석
박성준 · 서동용 · 서영석
송갑석 · 윤미향 · 윤재갑
이수진^(비) · 이인영 · 조오섭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손해를 입은 피신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어 공익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재판의 진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u> <u>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u> <u>형사재판 또는 제4항 단서에</u> <u>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u> <u>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u> <u>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u> <u>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u> <u>다.</u>